

민정수석실 문건 위법 논란 정쟁 대상된 '대통령기록물'

靑“대통령기록물 요건 안 돼” vs 野“아전인수격 해석”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건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권이 또 한 번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17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전체 경내 사무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문건 사본을 전달받은 검찰은 이날 캐비닛 문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증거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캐비닛 문건에 대한 법적 쟁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표한 직후부터 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강호상 대변인은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며 “정말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캐비닛 문건이 지정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물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춰 볼 때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도 정쟁의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간 관대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총리는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증거 인멸을 의도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이 되면 국회에 열람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박근혜 정권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폭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민주당은 그가 국정원이 보관중이던 회의록 발췌본을 무단 열람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의원을 고발했다.



김동철, 이연주에 입민속 ‘씻’ 국민의당 김동철(왼쪽)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3차의 원총회에 참석해 이연주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바른정당 “文정부, 北에 대화 구걸하는 것처럼 보여”

남북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 동시 제의 우려

바른정당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남북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동시 제의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고, 불과 2주전에 ICBM을 발사했는데 이 시기에 저자세로 대화를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논란이 일고있다”며 “미국과 일본도 두 제의의 시기적 부적절성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정

상회담과 국제사회의 기조에 전혀 맞지 않는 당황스러운 제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자극히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상봉 행사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소수 이산가족만 만나게 해왔다”며 “이런 식의 이산가족상봉은 남한 국민 전체를 불모삼고 흥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북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뒤로 미룬채 대화 추진에만 공을 들이는 데 반해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독자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엇박자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화를 위해서라며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작전인 대북 확성기를 끄기라도 하겠다는 태세”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관한채 혼자서 부르짖는 평화는 거짓평화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윤호 기자

정동영 “확성기·빠라로 압박 ‘北무너진다’는 허상 바뀌어야”

“당 혁신안 동의...강력한 대표체제로 위기 돌파해야”

참여정부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회담·적십자회담 동시제안과 관련해 “확성기 방송이나 빠라를 뿌려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무너질 거라는 허상을 좇아 왔던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설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는 북쪽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 문제는 군사·정치 문제”라며 “군사회담을 열어놓고 단계적으로 다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순순히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응해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북한이) 군사회담을 통해 비방방송 중단, 한미군사훈련 중단·축소를 요구해 왔다”며 “군사훈련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 압박하는 공을 이쪽으로 넘길지, 아니면 일단 군사회담을 열어놓고 가게 될지는 전적으로 북쪽의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의 최고위 폐지 및 단일지도체제 개편 제안에 대해 “진 동의한다”며 “절대적인 위기인데 강력한 대표 중심 체제를 구축해 돌파해보자는 제안”이라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어떤 지도체계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내 논의를 거쳐(도입하면 된다)”라며 “곧게 달려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 후 속조치에 대해서는 “윗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김윤호 기자

홍준표 “한국당, 실패한 기득권 세력...다시 시작해야”

“제대로 혁신하고 보수 가치 재정립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기득권 세력”이라며 혁신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가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보수가

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자료집 축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수지지층은 정권이 실패하고 보수 정당이 분열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큰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 뿔뿔이 흩어졌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어디 가서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수의 위기가 매우 엄중하다”며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직면한 위기는 하루 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체질로 변질됐다”며 “그래도 보수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마저 국정 실패를 겪으며 무너졌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철저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며 “이익이 아닌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빠이론 반성과 과감한 희생, 성찰의 토대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제대로 혁신하고 보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는데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조각발견, 자발치료 중인 민척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빈말에는 검진(민)이 포함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